**국무원의 경제 내실화 및 견고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

국발[2022]1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국무원 각 부서, 각 직속기구:

올해 들어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영도 하에 각 지역의 각 부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였고, 중앙경제업무회의와 <정부업무보고>의 배치에 따라 ‘6가지 안전’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6가지 보장’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실현하였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위험과 도전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환경의 복잡성, 심각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성장, 취업, 물가의 안정화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방역, 안정한 경제, 안전한 발전은 당중앙의 명확한 요구이다.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이념을 완전, 정확,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하여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 코로나19가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여 올해의 경제발전 예정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경제 내실화 및 견고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조치>를 전달하니 성실히 집행하기 바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조직 영도를 강화하고 본 지역의 실제상황을 결합하여 중앙경제업무회의정신과 <정부업무보고> 배치의 철저한 실행에 더 많은 힘을 보태며, 동시에 앞서서 힘을 쓰고, 적당히 힘을 주어 <경제 내실화 및 견고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조치>의 조속한 실행을 추진하고 적시에 시행되도록 하며, 가능한 빨리 경제의 안정과 기업의 어려움 해결 등에 더 큰 정책효과를 발휘하도록 한다. 각 부서는 긴밀히 협력을 조절하고 업무협력을 해야 하며, <경제 내실화 및 견고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조치>에서 제시한 6개 방면의 33개항 구체적인 정책조치 및 분업에 따라 본 부처 본 분야 본 업계의 업무를 다시 배치하여 추진하고 이행해야 하며, 패키지 시행세칙을 발표해야 하는 경우 5월말까지 전부 완성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은 조만간 관련 측과 함께 관련 성(省)의 안정적인 성장과 시장주체 및 취업 확보 현황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각 지역의 각 부서는 정치적 위치를 더욱 높이고 업무과정에서 책임감, 사명감 및 긴박감을 높여야 하며 하는 일에 책임지고 진실을 추구하며 한마음 한 뜻으로 완강하게 투쟁하여 거시적 경제를 안정시키는 책임을 확실히 부담해야 한다. 못을 박는 정신으로 당중앙, 국무원의 각종 정책결정 배치를 철저하게 실행하여, 2분기 경제를 확실하게 안정시켜 하반기 발전의 좋은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며, 경제운영의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여 실제 행동으로 당의 20대의 성공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

국무원

2022년 5월 24일

(본 문장은 일부 삭제가 있음)

**경제 내실화 및 견고화를 위한 패키지 정책 조치**

**(6개 방면의 33개 조치)**

**一. 재정정책 (7개항)**

1.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정책을 진일보 확대한다. 이미 발표한 제조업,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전기열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서비스업, 생태보호와 환경복원업, 민간공항 교통운수, 창고저장 및 우정(邮政)업 등 6개 업종 기업의 존량유보세액 전액환급과 증량이월공제세액 월별 전액환급을 기반으로 도소매업, 농·림·목축·어업, 숙박과 요식업, 주민서비스,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교육, 위생과 사회사업, 문화, 체육과 유흥업 등 7개 업종의 기업을 증량이월공제세액 월별 전액환급, 존량유보세액 일시불 전액환급 정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있으며, 새로 추가된 이월공제환급 세액은 1,42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소형기업,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환급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바탕으로 6월 30일까지 존량유보세액의 집중 환급을 기본적으로 완료하며, 올해 발표된 각종 이월공제세액 환급정책의 신규 환급총액은 약 1.64조 위안에 이른다. 세금환급 위험방지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탈세, 사기 등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2. 재정지출의 진행을 가속화한다. 지방이 예산 집행진도를 가속화하고 하달자금을 신속히 나누어 적시에 자금 지급업무를 잘 집행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한다. 이전 지급 예산을 조속히 하달하여 본급의 지출진도를 가속화하고, 기존자금 활성화를 강화하여 잉여자금과 2년 연속 소진되지 않은 이월자금을 규정에 따라 회수하여 총괄적으로 사용하고, 2년 미만 이월자금 중 원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회수하여 경제사회발전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총괄적으로 사용하고, 이월공제세액 환급, 프로젝트 건설 등을 결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재고보장을 강화하며 유관 업무의 순조로운 추진을 확보해야 한다.

3.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사용을 가속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의 특별채권 발행 사용 업무를 조속히 완성하고 올해에 이미 하달한 3.45조 위안 특별채권의 발행 사용 진도를 가속화하여 6월 말까지 발행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8월 말까지 기본적으로 사용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법에 따라 규정에 부합하고 위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정부는 인민은행, 은보감회와 함께 상업은행의 조건에 부합하는 특별채권 프로젝트 건설 주체에 대해 패키지 융자지원을 제공하고 신용대출 자금과 특별채권자금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 전기(前期)에 결정된 교통 인프라, 에너지, 보장성 주거공사 등 9대 분야를 기반으로 특별채권 지원 분야를 적절하게 확대하고 신형 인프라, 신 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4. 정부성 융자 담보 등 정책을 활용한다. 올해의 국가융자담보기금 재담보 합작업무 신규 규모는 1조 위안 이상이다. 조건에 부합한 교통운수, 요식, 숙박, 관광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정부성 융자 담보기구가 융자 담보 지원을 제공하고 적시에 대신상환의무를 이행하도록 격려한다. 금융기구의 조속한 대출 발급을 추진하고 맹목적으로 대출을 조기 회수하거나 부(不)지급 또는 차단하지 않는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한 융자담보업무를 국가융자담보기금의 재담보 합작범위에 포함한다. 중앙재정의 소형기업 융자담보 담보금 인하 및 장려 보조금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30억 위안 자금을 배정하여 융자담보기구가 소형기업 융자담보업무 규모를 진일보 확대하고 융자담보 담보금을 인하하도록 격려한다. 조건이 있는 지방에서 소형기업 및 농업 지원 담보업무의 담보금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한다.

5.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조달을 확대한다. 소형기업의 가격 공제율을 6%-10%에서 10%-20%로 높인다. 정부 조달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조달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프로젝트의 특점, 전문 유형과 전문 분야에 따라 조달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공동입찰과 대기업의 하도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 공정한 공개, 공평한 경쟁을 견지하여 통일적인 품질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예비조달 비중을 올해에 단계적으로 30%이상에서 40%이상으로 높이고 비(非)예비 프로젝트는 소형기업에게 심사혜택을 줘야 하며 중소기업의 계약규모를 확대한다.

6. 사회보험 납부유예정책을 확대 실시한다. 각종 사회보험의 대우를 적시에 전액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단위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한 개인사업자(개체공상호)에 대해 3가지 사회보험의 단위납부 부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납부를 유예하고 납부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요식, 도매, 관광, 민간공항, 도로, 수로, 철도 운수 등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5개 업종에 대해 3가지 사회보험 비용 납부 유예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업종내 대규모의 생산경영난이 발생하고, 국가산업정책 지향에 부합하는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양로보험금의 납부유예기간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7. 일자리 안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실업보험 환급정책을 최적화하고 환급비율을 진일보 인상하며, 대기업의 환급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한다. 실업보험 고용유지 보조금 혜택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코로나19의 심각한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할 수 없는 모든 보험가입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졸업연도 대학졸업생을 고용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실업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1인당 1500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은 성(省)별로 정하되 일회성 취업보조금과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정책 집행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二. 화폐금융 정책(5개항)**

8.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화물차 기사의 대출 및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개인주택 및 소비대출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하는 것을 격려한다. 상업은행 등 금융기구는 계속 시장화 원칙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주를 포함), 개인사업자, 화물차 기사 등과 자율적으로 협상하여 해당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하고 최대한 연장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이자의 상환시기는 원칙적으로 2022년말까지다. 중앙자동차기업 소속 금융자회사는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2022년 6월 30일 전에 발급한 상업용 화물차 소비대출금에 대해 원리금 상환 6개월 연장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해 입원치료 또는 격리,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격리관찰 또는 수입원을 잃은 자에 대해 금융기구는 그의 존속한 개인주택, 소비 등 대출에 대해 합리적으로 상환기간, 대출기한, 원금상환 등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환계획을 조정한다. 대출 연장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 판단을 견지하고, 코로나19 요인만으로 대출 위험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으며 신용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고, 벌금이자를 면제한다.

9. 보편적 특혜를 받는 소형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지원 및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한도를 계속적으로 늘린다. 보편적 소형기업 대출 지원 도구의 자금 지원 비율을 1%에서 2%로 인상한다. 즉, 인민은행이 관련 지방 법인은행의 보편적 특혜를 받는 소형기업 대출잔액 증량(원리금 상환 연장에 의한 보편적 특혜를 받는 소형기업 대출 포함)의 2%를 자금으로 지원하고, 지방 법인은행이 보편적 특혜를 받는 소형기업의 대출을 보다 잘 발급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금융기구와 대기업을 지도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저당 등 융자를 지지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정하여 상업어음 접수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재할인 지원을 확대하며 공급망 융자 및 은행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융합발전을 지원한다.

10. 실제대출금리의 안정적인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 전기 지급준비금을 잘 이용하여 신용대출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시장금리가격 책정 자율 메커니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출우대금리(LPR)로 인한 메커니즘 개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며, 예금금리 시장화 조정 메커니즘 작용을 발휘하여 금융기관이 예금금리 하락 효과를 대출단위에 전도하도록 유도하여, 실제대출금리의 안정적인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1. 자본시장의 융자 효율을 높인다. 기업공개(IPO)와 리파이넌스의 정상화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한다. 중국 본토 기업이 홍콩에서 상장하는 것을 지지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한 플랫폼 기업의 해외 상장을 추진한다. 금융기구의 금융채권 발급을 계속 지원하고 격려하며, ‘삼농’, 소형기업, 녹색, 쌍창(双创) 금융채권에 대한 녹색채널을 구축하고 중점 분야 기업에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은행간 채권시장과 거래소 채권시장의 각 인프라를 감독하고 지도하여 유료항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민영기업 채권융자 거래비용을 최대한 면제하고 민영기업을 지원하는 신호를 진일보 방출한다.

12. 인프라 건설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구의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성 개발성 은행은 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더 많은 장기 대출을 발급해야 하며, 상업은행을 인도하여 대출을 진일보 증가하고 대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보험회사를 격려하여 장기자금 우위를 발휘하여 수력, 수상 운송, 도로, 물류 등 인프라 건설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三. 투자 안정화 및 소비촉진 등 정책(6개항)**

13. 논증(论证)이 성숙한 수자원 공사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한다. 2022년에 남수북조 후속 공사 등 중요한 수자원 조달, 핵심적인 홍수대비 및 재난감소, 위험한 저수지 보강, 관개지구 건설과 개조 등 공사를 포함한 주요계획에 포함되고 조건이 성숙한 항목을 추가로 착공한다. 공사 프로젝트 리스트를 진일보 보완하고 조직실시와 조정추진을 강화하고 업무과정을 최적화하며 수자원 보장과 재난 대비 및 감소를 확실하게 개선한다.

14. 교통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한다. 강, 바다, 국경 연안 및 항구, 항행로 등 종합 입체형 교통망 공사에 대해 자원요소의 보장을 강화하고 심사절차를 최적화하며 실시를 조속히 추진하여 최대한으로 가능한 실시를 확보한다.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의 3,000억 위안 철도건설 채권 발행을 지지한다. 새로운 농촌 도로 건설과 개조를 시작하고 올해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바탕으로 금융 등 정책 지원을 진일보 강화하고, 신규&개조 농촌 도로 3만 km, 농촌도로 안전생명 보호 공사 3만 km, 농촌도로 위험한 교량 개조 3,000개를 추가한다.

15.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도시 지하 종합 관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각 지역은 도시의 노후 관망 개조 등 사업에 협동하여 관로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 신구에서 기능적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관로 간선 및 지선을 발전시키며, 합리적으로 관로 시스템을 배치하고, 각종 관로 부설사업을 총괄하도록 지도한다. 관로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다양한 조치를 취해 투자 및 융자 관련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조건을 갖춘 지하 종합 관로 사업을 추진한다.

16. 민간 투자를 안정화하고 확대한다. 국가 중대 기초시설 발전 계획의 편제를 시작하고, 기초시설 고품질 발전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며, ‘제14차 5개년’ 규획의 102개 중대 공정을 강력하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장려하고 유치하여 국가 중대공정 사업에 참여시킨다. 공급체인과 산업체인 입찰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우대하여 민영기업이 자산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난관을 돌파하도록 장려한다. 2022년 약 500개의 SRDI(Specialized, Refinement, Differential, Innovation) ‘작은 거인’ 기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민간 투자가 도시 기초시설 등 중요 분야에 투자하고, 종합개발모델을 통해 중점 영역의 사업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17. 플랫폼경제의 규범화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플랫폼경제의 규범화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플랫폼경제가 취업 안정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플랫폼기업과 그와 상생하는 중소형기업의 발전 전망을 안정화하고, 플랫폼기업의 발전을 통해 중소형기업의 난관 극복을 유도한다. 플랫폼기업이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방역물자와 중요 민생 상품에 대한 ‘최후 1km’ 공급을 보장하는 온·오프라인 연동을 유도한다. 플랫폼기업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운영체제, 프로세서 등 분야의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독려한다.

18. 자동차, 가전 등 대형 소비를 안정화하고 증가시킨다. 각 지역은 신규 증가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매제한 조치를 할 수 없고,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자동차 신규증가 지표 수량을 증가시키고, 차량구매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완화하고, 도시 및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지표를 차별화하는 정책의 실시를 장려한다. 자동차 구매관리에서 사용관리로 전환하는 정책문건을 신속하여 마련하여 추진한다. 중고차 지역 이동제한 정책을 전면 취소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 국가표준5 오염배출기준에 부합하는 소형 비영리운행 중고차의 전입제한을 취소하며, 중고차 시장주체의 등기등록, 비안 및(備案) 차량거래 등기관리규정을 완비한다. 자동차 완성차 수입항 지역에서의 병행수입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병행수입 자동차 환경보호 정보 공개제도를 완비한다. 픽업차량의 도시 진입에 대한 정교화 관리를 시행하고, 픽업차량의 도시 진입 제한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올해 안에 일정 배기량 이하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차량구매세 감면징수 지원책을 연구한다. 신에너지 차량 충전기(충전소) 투자-건설-운영 모델을 최적화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단지와 영리성 주차장에 충전시설이 모두 갖춰지도록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운송 중추지역 등에서의 충전기(충전소)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가전 생산기업을 독려하여 회수목표 책임제 행동사업을 전개하고, 금융기구를 유도하여 금융서비스 역량을 제고하여 소비 진작 수요를 만족시킨다.

**四. 식량 및 에너지 안전보호 정책 (5개항)**

19. 식량 수익 보장 등의 정책을 완비한다. 농자재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앞서 이미 200억 위안의 농자재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제2차 농자재 보조금 100억 위안을 적시에 지원하여 원가상승으로 인한 농사 수익 하락을 보전한다. 칼륨비료의 수입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최저 수매가격제도의 집행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쌀, 소맥의 최저수매가 수준을 적절하게 인상하는 정책적 요구를 잘 이행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수매를 시작하여 농민이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 농업보조금 정책을 최적화하고, 식량을 재배하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정책 프레임을 완비한다.

20. 안전하고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석탄의 우수한 생산능력을 질서 있게 방출한다. 완전한 석탄 생산량 장려-억제 정책기제를 수립한다. 법과 규정에 따라 탄광 수속 처리를 신속하게 보장 공급하고, 안전생산과 생태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노천 및 갱도 탄광 프로젝트의 생산능력 방출을 지원한다. 가능한 빠르게 원자력 증산 생산능력 정책을 조정하고, 안전생산 조건이 갖춰진 탄광이 생산능력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며, 탄광의 우수한 생산능력을 빠르게 방출하고, 적절한 조치로 전력소모를 줄여 전략 사용량이 최고에 달하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전력, 전기, 석탄의 공급 안전을 확보한다.

21. 에너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시행한다. 에너지 영역에서 기본적인 조건을 구비하여 올해 착공이 가능한 중대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한다. 진샤강 롱판 등 수력발전프로젝트의 전기(前期) 연구 검증 및 설계 최적화 업무를 적극적이고 견실하게 추진한다. 사막, 고비, 황무지를 중심지역으로 하는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 기지의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가까운 기한 내에 제2차 사업을 신속하게 개시하며, 대형 풍력-태양광 발전기지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토지, 산림, 초원, 물 자원을 총괄적으로 배치하며, 프로세스에 따라 건설기지 프로젝트, 석탄전력 프로젝트, 특수고압 송전라인을 승인 및 착공한다. 전력시스템 안전보장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신에너지의 규모화 발전에 있어 촉진기능이 뛰어나며,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펌핑 스토리지 발전소를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조건이 잘 갖추어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착공 건설한다. 장베이~셩리, 쓰촨/충칭 메인 네트워크 프레임 교류사업, 롱동~산둥, 진상~후베이 직류공정 등 복수 성(省) 간 전력 네트워크 프로젝트 계획과 전기(前期)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22. 석탄 비축능력과 수준을 제고한다. 석탄의 청결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특별 재대출과 적격은행 대출을 지원한다. 지방의 비축책임을 잘 다져 놓는다.

23. 원유 등 에너지 지원의 비축능력을 강화한다. 비축사업을 기획하고 조기에 착공한다. 정부 비축사업 건설을 추진하고, 이미 건설된 사업을 대상으로 비축능력을 빠르게 확보한다.

**五.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 안정화 보호 정책 (7개항)**

24. 시장주체의 물, 전기, 망(網) 사용 등 원가를 인하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 생산경영 어려움이 발생한 소형기업 및 개인사업자(개체공상호)의 물, 전기, 가스 사용을 대상으로 ‘체납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6개월간 비용 납부 유예기간을 설정하며, 또한 현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 유예기간에는 체납 연체금의 징수를 면제한다. 지방에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개체공상호)의 물, 전기, 가스 등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도시지역 물, 가스, 난방 공급 등 업종의 수수료를 가다듬어 규범화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취소하며, 정부 지정가격과 경영자 가격 요금 수취 행위를 규범화하고, 유보된 수수료 항목에 대한 목록화 관리를 시행한다. 2022년 중소기업의 초고속 인터넷과 전용선 평균요금을 10% 재인하 한다. 입찰 분야에서 보증서(보험)를 전면 추진하여 응찰, 이행, 공사품질 등 보증금의 현금 납부를 대체하고, 입찰인이 중소기업 응찰자를 대상으로 응찰 담보 제공을 면제하도록 독려한다.

25. 시장주체 부동산 임차료의 단계적 감면을 추진한다. 2022년 서비스업 소형기업과 개인사업자(개체공상호)가 임차한 국유부동산을 대상으로 3-6개월 임차료를 감면한다. 임대인이 임차료를 감면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방산세, 성진토지사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유은행을 유도하여 임차료를 감면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우대금리 담보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비(非)국유부동산의 임차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상술한 우대정책을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다.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시장주체의 부동산 임차료를 감면하는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유도한다.

26. 민간항공 등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곤란 지원역량을 확대한다. 석탄의 청결하고 효율적인 사용, 교통 물류, 과학기술 혁신, 보편적 양로 등 특별재대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민간항공 긴급대출 한도액을 1,500억 위안 증액하고 지원범위를 적절히 확대하여 경영곤란 항공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항공산업 지원을 위해 2,000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 민간항공 기초시설 건설 수요 등 요인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자금부족 등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한다. 또한, 관련 항공업체에 대한 자산 투자의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국제 여객 항공편수를 질서 있게 늘려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와 대외 경제무역 교류 합작을 위한 여건을 형성한다. 은행을 독려하여 문화 여행, 요식, 숙박 등 코로나19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27. 기업의 조업재개 및 생산 달성 정책을 최적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지역에서 운행보장기업, 방역물자 생산기업, 연속생산 운영기업,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 중점기업, 중점 대외무역 외국계투자기업, ‘SRDI(Specialized, Refinement, Differential, Innovation)’ 중소기업 등 중점기업을 대상으로 조업재개 및 생산 달성 “화이트리스트”제도를 수립 및 정비하고, 적기에 ‘점대점(Point-to-point)’ 운송, 비대면 인수, 녹색통로(Green Channel) 등 경험에서 체득한 방법을 총결산하여 보급하며, ‘화이트리스트’ 기업 대상 서비스 조치를 세분화하여 실현한다. 정부 부서와 성(省)의 연계 및 구역간 상호인정을 추진하여, 산업체인과 공급체인 기업의 조업재개와 생산달성 사업을 협력하여 진행한다. 각 지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속지(屬地)책임제를 실현하고, 코로나19 발생시 조건이 갖춰진 업체가 폐쇄 루프 생산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고, 원칙적으로 생산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기업소재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통제를 위한 지도업무를 잘 수행하고, 기업 근로자의 일자리 복귀, 물류 보장, 전후방 연결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며, 코로나19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감소시킨다.

28. 교통물류의 신속한 통행을 위해 정책을 개선한다.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에서 온 화물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목적의 통행제한을 전면 취소하고 제조업 물류의 병목현상 해결에 힘써 완성품 재고회전 속도를 가속화한다. 고속도로, 일반도로, 항로 및 갑문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폐쇄할 수 없고 현(縣), 향(鄕), 진(鎭)의 농촌도로 강제 격리를 엄격히 금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항구 부두, 기차역 및 민용 운송공항을 임의로 폐쇄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에서 사람의 정상적인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코로나19 중등 또는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도시에서 오거나 또는 해당 도시를 진입/진출한 화물운송 차량에 대하여 ‘즉시 검사샘플 채취 검사, 음성 판정 후 즉시 출발, 양성 판정 후 즉시 비대면 조치’ 제도를 실행한다. 여객 및 화물운송 기사, 택배배달원, 선원이 타지역의 무료 검사시설에서 핵산검사와 항원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현지 정부는 현지 거주자로 간주하여 검사범위에 포함시켜 동등한 정책을 향유하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모든 비용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29. 물류허브와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역량을 총체적으로 확대한다. 닝보 저우산 대량상품 비축운송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대량상품 비축운송기지의 전체 배치 계획에 대한 연구를 전개한다. 2022년, 중앙재정 약 50억 위안을 배정하여 전국형 중점 허브도시를 선정 지원하고 허브의 화물 집산, 창고, 중계 운송, 긴급 보장 역량을 향상시키고 멀티형 연합운송 복합 발전을 유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며, 종합 화물운송 원가를 낮춘다. 2022년, 중앙재정인 서비스업 발전자금에서 약 25억 위안을 배정하여 농산품 공급체인 시스템 건설의 가속화를 지원하고, 약 38억 위안을 배정하여 현(縣) 지역의 상업 건설행동 사업의 시행을 지원한다. 1,000억 위안의 교통물류 특별재대출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교통물류 등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구조적 화폐정책도구를 사용하여 공급체인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산품 주산지와 특화농산품 우위지역에 현지 소형 냉장 신선도 유지시설을 건설하고, 생산판매용 콜드체인 집중배송센터의 건설을 추진한다.

30. 중대 외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외상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미 업무전담반에 편입되고 녹색통로(Green Channel)를 열어 추진하고 있는 중대 외자 프로젝트에 기초하여, 중대 외자 프로젝트의 견인 및 유도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유인기능이 강력하며, 산업체인 전후방 영향력이 큰 중대 외자 프로젝트를 가능한 신속하게 논증하여 개시한다. <외상투자 장려 산업목록> 수정을 가속화하여 외국자본이 선진제조,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와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 더욱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외상투자자를 지원하여 하이테크 연구센터 등을 설치한다. 기업의 크로스보더(Cross Boarder) 융자채널을 더욱 확대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하이테크 및 SRDI(Specialized, Refinement, Differential, Innovation) 기업을 대상으로 외화차입 편리화 및 한도액 관련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중국 소재 외국협회, 외자기업과의 일상적 교류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편의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외상투자를 더욱 견고히 확대한다.

**六. 기본 민생보장 정책 (3개항)**

31. 주택공적금의 단계적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기한 만료 후 보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주택공적금을 예치한 근로자는 인출 및 주택공적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신청하며, 납부유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예치자가 주택공적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연체로 처리하지 않고 신용조회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각 지역은 현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공적금 인출한도액을 인상하여 실제 수요에 더욱 부응하도록 한다.

32. 농촌 이전인구와 농촌노동력의 취업 및 창업 지원정책을 보완한다. 농촌 이전인구의 흡수가 비교적 많은 지역과 산업을 대상으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 재정 농업 이전인구 시민화 장려자금 400억 위안을 배정하며, 상주지역에서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추진하여 완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시민을 창업 담보 대출 지원범위에 포함시킨다. 국토 공간 규획과 전년도 도시 이주 및 정착 인구수에 따라 각종 도시지역 연간 신규 건설용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 농촌노동력의 현지 근거리 취업채널을 확대한다. 중대공정 건설, 일자리 마련 구제사업에 농촌노동력을 우선 사용한다.

33. 사회 민생 최저 보장조치를 보완한다. 각 지역이 사회 구호 및 보장 기준을 물가상승과 연계시키는 연동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적기에 충분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중앙재정에서 하달한 1,547억 위안의 구호 보조자금을 사용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을 잘 다지며, 재정자금의 직통 메커니즘을 통해 구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적기에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재민에 대한 생활 구호조치를 시행한다. 구호와 생활보장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밀한 지원사업을 이행한다. 일시적 생계곤란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대중의 기본생활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여 쌀, 면류, 기름, 야채, 정육, 계란, 우유 등 생활물자의 공급 보장과 가격안정화 사업을 잘 수행한다. 발전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생산책임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고, 대대적인 안전검사를 심도 있게 전개한다. 교통, 건축, 탄광, 가스 등 분야의 안전사고를 엄격하게 예방하고, 자가건축 부동산에 대한 안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한다.